

소규모 복합공사 논쟁... 건설노조·장비업계도 '반대'

김정석 | 건설경제신문 차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개 이상의 복합 공종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하에 도급 시공하고, 단일 공종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맡도록 등록 체계를 두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해당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0일 입법 예고

했다. 이어 5월 20일까지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입법 예고가 나오자마자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복합공사 일감을 전문건설업계에 잠식당하게 생긴 종합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종합건설업계가 거리로 나서 반대 집회를 여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특히,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는 지방의 중소 종합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설업 등록을 반납하지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반대로 전문건설업계는 도입 이후 지지부진한 소규모복합공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들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입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는 지난 2008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를 반대했던 전문건설업계를 무마하고자 도입됐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겸업을 허용하면 종합건설사들의 전문건설업 잠식이 우려된다는 전문건설업계가 이를 반대

하자 종합건설 일감 가운데 3억원 이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떼어 준 셈이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의 우려와는 다르게 검업 허용 이후 종합의 전문 진출보다는 전문의 종합 진출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상실됐다는 것이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는 도입 이후 제 역할을 못하는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협소하게 규정된 금액 범위와 과도한 제약 조건 때문에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억원 미만으로 시행해 보니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미미해 범위를 확대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돼야 우수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전문건설업 영위 후 종합건설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파급 효과 어느 정도일까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파급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논거와 주장을 펼치고 있

다. 이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부문이 범위를 확대했을 때 종합에서 전문으로 이전되는 공사 물량이 과연 얼마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에서 전문으로 이전되는 공사 물량이 3~5%(1,500억~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에서는 최대 6조 5,000억원 수준의 물량이 이전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차이는 삼십 배에 이른다.

종합측은 3억원 미만 시장에서는 '의제부대공사' 형태의 발주로 굳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제부대공사는 주된 공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나머지 공종을 부대공사로 봐서

단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3억원 미만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많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확대 효과를 추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3억~10억원 시장에서는 의제부대공사제도가 없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더욱 늘어난다고 종합측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측은 종합건설업체가 강제 이전 물량을 민홍철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1조 9,809억원으로 주장하다 이번에는 6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3억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과 전문 공사의 단순 합산 비율(25 : 75)을 3억 이상~10억원 미만 구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5월 13일 종합건설업체 종사자 3,0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에 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바꾸려면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결국, 종합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와 업계 주체들이 이를 함께 검증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건설노조 · 장비업계 등도 반발

논쟁은 종합과 전문은 물론 건설산업 생산 주체들로 번졌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반대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업계가 반대 집회에 나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노숙 농성을 벌일 정도로 건설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전문건설업계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불법 재하도급,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에 공사를 더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설 장비업계 쪽에서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반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금 깊어진 종합 · 전문 업계

이번 사태는 정부와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종합과 전문 건설업계의 대립도 심화시켰다. 그러나 하향 추세가 완연한 건설산업의 주체들이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할 때가 아니라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같이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파이 싸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공공시장에서는 표준시장단가 도입과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과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범 건설업계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 나아가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기관의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가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비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 업계가 가까운 역량을 영뚱한 곳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일이다.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힘을 모았던 종합과 전문의 상생 정신이 다시 요구된다.

업역 문제 다시 생각하는 계기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업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종합과 전문으로 나누고 영업범위에 선을 그어놓은 건설산업 체계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이 같은 칸막이식 규제를 철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해서도 종합과 전문 건설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영역을 만든다는 논리를 밝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종합과 전문 업역 폐지에 앞서 시험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는 한 쪽만 터서 공사 물량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할 바에야 업역을 철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업역과 영업 범위 폐지가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는 물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와 업종별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CERIK